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108
----------	-------

발의연월일 : 2025. 4. 25.

발 의 자 : 정춘생·황운하·박은정
김준형·김선민·이해민
강경숙·백선희·차규근
서왕진·신장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외문화유산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다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국내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보존·활용 정책과 달리, 협상·매입·기증 등을 통한 ‘환수’나 현지에서의 ‘보존 및 활용’ 등이 정책의 주요 방향임.

그런데 국외문화유산 환수 등의 정책은 프랑스의 외규장각 의궤 반환의 전례처럼 범정부적 외교 협상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유산 보존·활용 정책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되어 국외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법·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된 국외문화유산을 환수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활용과 환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4조).

다.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국가유산청장은 국민이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를, 국외문화유산의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위하여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데 활용되도록 노력하며,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5

조, 제16조 및 제18조).

사.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연구 등 국외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을 설립함(안 제21조).

아. 누구든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고, 국가유산청장 등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등을 예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4조).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활용과 적극적 환수를 통하여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 문화의 발전 및 인류문화의 공존·공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외문화유산”이란 외국에 소재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문화유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단서 또는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 기간 국외로 반출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한민국과 역사적·문화적으로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보존”이란 국외문화유산을 적합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가치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3. “활용”이란 국외문화유산을 그 가치와 의미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환수”란 국외문화유산을 협상·구입·기증 등의 방법을 통해 국

내로 영구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처”란 국외문화유산이 제작·발견·발굴 등으로 출현한 때부터 현재까지의 소재 및 소유권의 변동 이력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는 원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국외문화유산이 불법·부당하게 국외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된 국제조약에 위반되어 국외로 반출된 것은 환수되어야 한다.

③ 국외문화유산은 현 소재국 또는 소장기관 등에서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외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5년마다 국외문화유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외문화유산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3. 국외문화유산의 조사, 정보화에 관한 사항
4. 국외문화유산의 국제협력,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국외문화유산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6. 제21조에 따른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과 관련된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공표하여야 하고, 시행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의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회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에 대한 의견 청취)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관련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국외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11조(국외문화유산의 조사·연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출처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소재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제1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재외공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국외문화유산의 출처 확인 및 조치) ① 국외문화유산을 보존·활용 및 환수할 목적으로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 개인 소장자 등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기

관이나 단체는 사전에 해당 국외문화유산의 출처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처를 확인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가입한 유산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련 지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지원 현황이나 출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출처 조사 결과 과거 불법적 수단으로 반출·반입된 경우에는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불법적 수단이란 침략시 약탈, 강점시 강탈, 도굴·도난 등 정상적인 수단에 반하는 행위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제13조(국외문화유산 정보화의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하고, 국민이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유산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국외문화유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외문화유산협력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따른 상호 협력과 국제교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외문화유산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국외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여건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멸실 또는 훼손 위기에 있는 국외문화유산의 보호대책 수립
 4. 정보체계 구축 및 정보 이용
 5.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국가유산청장은 협력망의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협력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협력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제15조(국외문화유산의 보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환경 개선 및 보존을 위한 수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이 우리 민족문화를 홍보·선양하는 데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환수 성과 등을 전시하고 홍보·교육하기 위하여 전시관이나 홍보관, 역사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 및 재외 한인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홍보·선양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국외문화유산의 교육)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을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 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국외문화유산의 환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이 처한 상황에 따라 환수 전략을 수립하고, 협상·구입·기증 등 다각적 방법을 통하여 국외문화유산의 환수를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수된 문화유산이 국내에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제협력 및 협정 체결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국제기구, 외국 소장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인력의 국제교류 또는 공동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국외문화유산 보존·활용 및 환수 활동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육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선정 및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국외문화유산재단

제21조(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 ①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및 출처 등에 대한 조사·연구,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와 관련한 각종 전략·정책 연구 등 국외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외문화유산 재단을 설립한다.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또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외문화유산의 현황, 출처 등에 대한 조사·연구
2.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한 연구
3. 국외문화유산의 취득 및 보존·활용
4. 협력망의 운영 지원
5.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교

류 및 국제연대 강화

6.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7. 외국박물관 한국실 운영 지원

8. 한국담당 학예사의 파견 및 교육 훈련

9. 국외문화유산의 수리 및 홍보 지원

10.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공로자에 대한 예우

11. 정보체계의 운용 지원

1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3.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이 경우 수익사업은 국가유산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그 밖에 국외문화유산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⑥ 국외문화유산재단은 국가유산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금전 등의 기부) ① 누구든지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를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국외문화유산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1항에 따른 기부가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접수한 기부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제2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및 처리 상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부 및 접수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외문화유산재단이 아닌 자는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보칙

제24조(공로자 예우)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외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로자의 기준과 시상 등 예우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거나 국외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환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7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국외문화유산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가유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국외문화유산재단으로 본다.

② 국외문화유산재단은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를 삭제한다.

제8장(제67조부터 제69조의4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